

# ‘옥중조사 거부’ 이명박 재판선 적극 방어할 듯

중앙지법,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다스 실소유 증거’ 쟁점 될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의 ‘옥중조사’를 완강히 거부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선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준비기일은 1회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 변호인 등과 사건의 쟁점(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정리된 재판의 쟁점과 각종 증거들을 변호인들과 꼼꼼히 분석해 ‘본게임’인 공판기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지난 3월 22일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4월 9일에는 구속 전 준비해 둔 글을 통해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구속 당시에는 전날 새벽 미리 작성한 편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매기 때마다 철저한 준비성을 보여왔다.

이 전 대통령은 상황에 관계 없이 법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구속 전날 태도가 젊은 시절 감옥에 갔을 때와 같았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세”라며 “계산에 워낙 밝고 꼼꼼해서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태도로 재판에 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에선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판가름할 증거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검찰은 그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므로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범종 기자 joker@

# 韓 의료비지출 증가율 6.8% OECD 회원국의 3배 달해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일본 2.6%·독일 2.3%·스위스 1%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 7.6%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증가율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부차원의 국민건강보험 부담도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서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동기 주요국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일본(2.6%), 독일(2.3%), 스위스(1.0%), 캐나다(1.7%), 프랑스(1.1%)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2014~2015년에도 프랑스(-0.2%), 아일랜드(-0.3%), 일본(-0.8%), 그리스(-0.9%), 이스라엘(-1.2%) 등은 경상의료비가 감소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평균 4.2%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증가세는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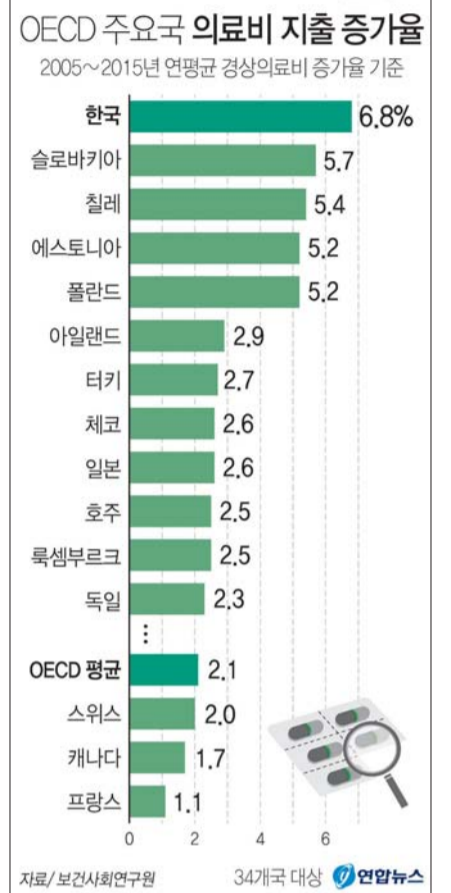
공행진 중이다. 2005~2016년 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6%로, 영국(4.2%), 미국(3.0%), 캐나다(2.3%), 일본(3.4%)과 큰 차이가 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13년 6.9%(OECD 평균 8.9%)에서 2016년 7.7%(OECD 평균 9.0%)로 급증해 OECD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도 주요국들에 비해 훨씬 크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국민건강보험 공적 부담 비율은 2016년 56.4%로, OECD 평균(72.5%)보다 훨씬 낮다.

보고서는 “의료의 질과 접근도는 항상 추세이나 정부의 비용 통제력이 나빠 한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이 과거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다가올 비용 압박에 대응하려면 시스템 혁신과 성과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을 체계화해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할



자료/보건사회연구원 34개국 대상 연합뉴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 340억 횡령혐의 이명박, 재산 추가동결될까

檢, 부패자산 몰수·회복 특례법 연구

검찰이 횡령 범죄 수익 몰수 방안을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34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여부가 관심을 끈다.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부패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법이다. 2008년 3월 제정돼 같은해 4월 시행됐지만, 횡령 범죄 수익을 몰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죄는 뇌물죄와 달리 범죄 피해자가 따로 있어, 피해자가 범죄수익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문창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난 2월 대검의 범죄수익환수와 설치된 문 창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범죄수익환수과는 개별 범죄수익 몰수보다는 횡령죄 범죄수익 몰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 부지 등을 추징 보전했다. 이들 재산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돼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 등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액 340억원이 몰수 대상이 될 경우, 추가 재산 동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범종 기자

## 원예작물 바이러스 감염 2분내 확인

# 농진청, 400억원 농가피해 예방했다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보급

무분별한 비료·약제 오남용 막아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7년부터 개발·보급한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활용으로 연간 약 400억 원의 농가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이러스병을 생리장해 등 유사증상으로 잘못 판단해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비료나 약제 오남용에 의한 농업생태계 오염을 막는 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농진청에 따르면 휴대용 진단키트를 이용하면 농가 현장에서 2분 이내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수박, 오이, 멜론, 고추, 토마토 등 채소작물 총 10개 품목에 활용 가능하다.

농진청은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2007

년부터 현재까지 총 15종을 개발해 13만 4300여 점을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미세한 나노 크기의 금 입자(직경 40nm)에 바이러스 특이적 항체를 부착하고 바이러스와의 결합반응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채소작물의 잎을 따서 으갠 후 그 즙을 진단키트에 떨어뜨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막대종이처럼 생긴 스트립형 진단키트의 보존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임신진단키트와 같은 카세트형이 개발됐다. 또한 올해는 박과작물 바이러스 2종(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도 개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150여 종의 바이러스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주로 식물체에 얼룩 증상이나 마르거나 시들게 하는 등 이상증상을 일으켜 품질과 수량을 크게 떨어뜨린다. 더구나 기후변화와 국제농산물 교역량이 증가되면서 바이러스병 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아직까지 바이러스병의 치료 약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바이러스병을 초기에 진단해 건전한 식물체로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책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명래 농진청 원예작물부장은 “앞으로 작물별로 여러 종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도 개발해 2020년부터 농업 현장에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 해수부, 수산물 해외판로 개척 총력

지원사업 로드맵 마련·시행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수출 2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방안을 담은 ‘2018년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우리 수산물 수출은 지난해에 전년 대비 9.5% 증가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한 5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환율 불안, 비관세장벽 강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여건의 불확

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경쟁력 있는 수출기반 조성 ▲수산물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수출업계 애로 해소 및 역량 강화 등 3대 추진과제 및 이와 관련된 세부 사업 추진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우선, 경쟁력 있는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차세대 스타품목 발굴을 통한 글로벌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식품 수출기공률 리스터 조성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세종=최신웅 기자

## 한국석유공, 부실투자 원인규명 착수

양수영 사장, 재발방지 대책마련 착수 내부감사·책임자 배상소송 등 추진

취임 한 달을 맞은 한국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이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공동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과거 부실투자로 막대한 국고손실이 초래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 또 대형 부실사업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과거 외부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투자로 부채비율이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석유공사 기업회생TF 출범식. 양수영 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600%를 상회하며 향후 재무구조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석유공사는 이번에 양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업회생 TF를 신설해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22개처, 112개 팀의 조직을 18개처 99개팀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회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자 3급 이상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의 10%를 반납하기로 결의했으며 양 사장은 임금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특히, 대표적인 부실투자로 지적을 받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업은 오일샌드 개발 사업인 블랙골드와 전통적인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 각각 다른 해법을 적용해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웅 기자